

주요 업무 보고

2000. 5. 27

재정경제부

《 목 차 》

Ⅰ 환 / 1

Ⅱ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 / 2

정책과제

1. 재정정책의 안정적 운용 / 4

2. 시 관리대책 / 6

3. 상 안정대책 / 8

4. 조개혁 / 12

5. 공평성·효율성 제고 / 14

6. 「직 복지」 구현 / 16

7. 경제에의 대비 / 18

I. 일반현황

1. 주요기능

- 장·단기 경제정책의 수립 및 조정
- 조세제도 및 관련 정책의 수립·운용
- 금융정책 및 금융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
- 국고·국유재산관리 및 정부회계에 관한 사무의 집행
- 외환 및 외채관리정책의 수립
- 대외경제협력에 관한 장·단기 정책의 수립
- 국민생활의 안정 및 질적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

2. 조 직

- 본 부 : 1차관보, 2실, 6국, 7관 41과(담당관 포함)
 - 기획관리실, 세제실
 - 경제정책국, 국고국, 금융정책국, 국제금융국, 경제협력국, 국민생활국
 - 공보관, 비상계획관, 세제총괄심의관, 재산소비세심의관, 관세심의관, 정책조정심의관, 국제금융심의관
- 소속기관 : 세무대학, 국세심판원
- 외 청 : 국세청, 관세청, 조달청, 통계청

3. 정 원

(명)

	정무직	일반직	기능직	계
본 부	2	423	84	509
세무대학	-	57	29	86
국세심판원	-	70	24	94
계	2	550	137	689

II. 최근의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

- ◇ 국내경제는 물가가 안정된 가운데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
- ◇ 다만, 경상수지 흑자 감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
 - 국제유가, 미국금리 및 주가 등 해외불안요인과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라 불안심리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

□ 실물경기는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상승속도는 완만해지는 모습

○ 산업생산은 1~2월중 26.8% 수준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나 3월 17.6%, 4월 16.9%로 증가세가 둔화

- 업종별 증가세는 반도체, 컴퓨터, 자동차 중심에서 점차 다른 업종까지 확산되고 있으며, 기업창업활동도 매우 활발

* 업종별 산업생산(1/4분기, %) : 반도체 28.4, 컴퓨터 131.0, 자동차 40.0

* 3대업종 제외 산업생산(1/4분기, %) : 15.5

* 신설법인수(개) : (98.1/4) 4,715→(99.1/4) 6,865→(2000.1/4) 11,710

○ 금년 1/4분기중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12.8%의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나,

- 전분기대비 성장률은 1.8%수준으로 99.2/4분기이후 계속 둔화되고 있어 경기과열에 대한 우려는 점차 완화될 전망

(전년동기대비,%)

	99.1/4	2/4	3/4	4/4	연간	2000.1/4
· 경제성장률	5.4	10.8	12.8	13.0	10.7	12.8
(전분기 대비)	3.1	4.1	3.3	2.8	-	1.8

□ 고용은 경기회복의 가속화, 실업대책의 적극적 추진에 따라 4월중 실업률 4.1%, 실업자 90만명으로 3월대비 0.6%p, 13만명 감소

○ 고용증대에 따라 금년 1/4분기 소득분배도 개선

* 지니계수 : (99.1/4) 0.333 → (99.3/4) 0.310 → (99.4/4) 0.327 → (2000.1/4) 0.325

□ 소비자물가는 4월말 현재 전년말대비 0.4%, 전년동월대비 1.0% 상승에 그쳐 안정세가 지속

○ 앞으로 공공요금 인상, 임금상승, 유가상승 등 불안요인이 없지 않으나,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금년 소비자물가는 당초 목표인 연평균 3% 이내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됨

* 유가 1불/bbl 상승시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: 0.17%p(KDI), 0.22%p(한은)

□ 수출의 높은 증가세가 지속(1~4월중 26.9%)되고 있으나 수입이 더 크게 증가(1~4월중 50.6%)하여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크게 축소

○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1~4월중 8억불의 흑자를 기록하였고, 1~3월중 경상수지는 13억불의 흑자를 시현

* 원유도입단가가 1~4월중 이미 당초전망(20~22불/bbl)을 상회(26불/bbl)하여 경상수지흑자를 20억불이상 감소시킨 결과

* 4월 경상수지는 이자지급 집중 등으로 97.11월이후 처음으로 소폭의 적자가 예상되나, 5월에는 수입증가세 둔화에 따라 흑자로 전환 예상

□ 금융시장은 금리가 안정되어 있는 가운데 주가는 대내외적인 요인의 영향으로 약세 시현

○ 금리는 콜금리가 5%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장기금리는 새한그룹 워크아웃, 유가상승 등의 영향이 있었으나, 안정세를 회복

○ 주가는 국제금리 및 유가상승, 금융·기업구조조정의 불확실성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다소 악화되고, 이에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약세 국면

Ⅲ. 주요 정책과제

1. 거시경제정책의 안정적 운용

- ◇ 경제성장률이 점차 둔화되고 있으나 연간 성장률은 8%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여 거시경제정책운영에 확고한 원칙(discipline)이 필요
- 당면한 금융·기업구조조정의 시급성에 비추어 「저물가-저금리」체제의 확고한 구축이 최우선 목표
- 따라서 인플레이 압력이 가시화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「재정긴축, 금융신축」의 현행 거시경제정책조합틀을 유지하되,
- 앞으로 국제수지 흑자가 급속히 악화되거나 인플레이 압력이 가시화될 경우, 재정을 추가적으로 긴축하고 금리를 상향조정하는 방식으로 거시경제정책 조합을 재조정(rebalancing)

□ 재정의 긴축운용

- 금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당초 예산보다 5조원 축소된 13조원이하(GDP대비 $\Delta 2.6\%$)로 축소
 - * 높은 경제성장률(8%수준)에도 불구하고, 재정이 여전히 경기확장적으로 작용(통합재정수지적자 GDP대비 2.6%)하는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급한 사회안전망확충을 위한 금년도 추경편성을 1.5조원 범위내에서 억제
- 금년에 경기확장에 따라 세수증대가 이루어지는 경우, 재정적자 축소 및 국채상환에 우선 사용

□ 금융의 신축 운용

- 통화는 한국은행이 정부와 협의하여 정한 근원인플레이션 목표($2.5 \pm 1\%$)를 달성하는 수준에서 신축적으로 운용
 -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예측 가능성과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의사전달 체계를 마련
- 장기금리가 한자리수에서 안정될 수 있는 여건 마련
 - 인플레 기대심리의 차단을 통하여 금리상승 압력을 최대한 해소하고 자금시장에서의 마찰적 요인을 제거

□ 비용측면에서의 인플레 기대심리를 철저히 차단

- 각종 서비스 요금의 담합인상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, 과다인상이 없도록 자치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의 감시·견제 활동 강화
- 임금상승이 물가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생산성 향상 범위내에서 임금인상 분위기 조성
- 공공요금의 인상요인은 공기업 경영혁신을 통해 최대한 자체흡수토록 하되, 불가피한 부분은 금년도에 반영 추진

□ 외환수급대책을 통한 환율안정 도모

- 원/달러 환율은 1~4월중 절상추세를 보여왔으나, 5월들어 동남아 통화약세 등으로 1,130원대로 상승
 - * 5.24일 현재 99년말대비 (기준환율) 1.11% 절상, (종가환율) 0.44% 절상
 - 대외거래 증가에 따른 무역신용 증가 등으로 단기외채 비중이 증가
 - * 단기외채 비중(%) : (97말) 39.9 → (98말) 20.6 → (99말) 27.9 → (00.3말) 30.3
- 금년 하반기 이후에도 외환수급안정을 도모하는 한편, 무역신용을 금융기관 외환건전성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등 단기외채 증가를 억제해 나갈 방침

2. 경상수지 관리대책

- ◇ 경상수지가 대외신인도 등에 미치는 영향등을 감안하여
거시정책적 노력 뿐만아니라
- 에너지 절약시책 등 다각적인 미시대책을 강구하여
경상수지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강구

□ 1~4월중 무역수지흑자는 7.7억불수준에 불과하여 연간
전망치 120억불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

○ 수출은 세계경기회복,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목의 경쟁력
강화에 힘입어 27%의 견조한 증가세를 보인 반면,

○ 수입은 유가상승 및 빠른 국내경기회복에 따라 51%
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냄

- 수입금액 증가분중 유가상승 등 가격상승요인이 약 23%,
물량증가요인이 약 27%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

- 원유 등 원자재수입이 61%, 정보통신기기 등 자본재
수입이 52% 증가하여 수입증가세를 주도

* 원유·석유류 제품(억불) : 524→1166(+642억불, 전체수입증가액의 37%)

* 정보통신기기(억불) : 17.9→41.2(+23.3억불, 전체수입증가액의 13%)

- 특히, 유가상승에 따른 추가부담액은 전년동기대비
약 64억불로서 이를 제외할 경우 수입증가율은 38%수준에 해당

○ 수출입 수준을 외환위기 이전인 97년과 비교해볼 때,
수출은 위기이전수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나, 수입은
비슷한 수준

* 97대비 2000년 1~4월중 수출수준 비교 : 128.7

* 97대비 2000년 1~4월중 수입수준 비교 : 104.6

□ 정부는 경상수지가 대외신인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연간 전망치 달성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임

① 거시정책부문에서는 현행과 같이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영하고 외환수급대책도 적절히 운영

○ 다만 경상수지 흑자가 급속히 악화되거나 인플레이 압력이 가시화될 경우, 거시경제정책을 적기에 대응하여 조치

② 미시정책부문에서는

○ 반도체 등 탄력을 받고 있는 주력품목의 수출증가세 가속화, 플랜트수주 확대 및 해외전시회 참가촉진 등 추가적인 수출확대 대책 추진

○ 시민단체 및 주요언론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소비절약 운동의 추진

○ 에너지 고효율기기 보급확대 등 에너지 절감대책 추진, 개발된 부품, 소재의 수요창출 등 강력한 수입절감 대책 추진

- 유가 및 전력요금은 인플레이압력이 가시화되지 않는 이상 가격인상요인이 있는 경우 즉시 반영

○ 정보통신분야의 중복·과다투자 방지를 유도

○ 부품, 소재산업발전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부품·소재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

③ 무역외수지 부문에서도 여러 부처와 공동으로 최선의 방안을 추진해 나갈 예정

○ 차별화된 전략적 해외홍보, 관광숙박시설 확충,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등으로 관광수지 개선

○ 중동건설사업, 중국 서부지역 개발사업 참여 등 해외건설 용역수지 개선

○ 신규 항로 확충 및 국제해운 협력 강화 등으로 운수수지 개선

3. 금융시장 안정대책

- ◇ 우선 금융부문의 부실규모를 투명하게 노출시켜 시장에서 더 이상 불필요한 우려가 없도록 대처하고
- ◇ 부실채권을 자기책임하에 질서있게 순차적으로(orderly and sequentially) 정리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시장안정의 초석을 마련

□ 투신 부문

- 한국·대한투신의 경우 고유계정의 손실이 누적된 상황에서 대우채의 손실이 크게 발생하여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
 - 이에 따라 투자자의 불안해소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지난해말 정부와 국책은행이 우선 3조원의 공공자금을 투입
 - 그러나, 대우관련 손실과 신탁재산의 clean화 등에 따른 손실이 현재화됨에 따라 투신권 전체가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으므로 4.9조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하여 근본적인 경영정상화를 추진
- * 5.24일(수) 자산관리공사의 여유자금 중 2조원을 양투신사에 예치하였고, 6월중 산은·기온에서 2.9조원을 양 투신에 예치하여 총 4.9조원의 유동성을 조기지원한 후, 추후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으로 출자전환
- 현대투신은 대주주인 현대그룹의 책임하에 금년중 12조원을 투입, 자본잠식을 해소하기 위한 자체 경영정상화 계획을 추진중
- 나머지 투신사는 금년 3월말까지 신탁자산 clean화 작업을 완료하고, 유상증자 등 자구노력을 통해 건전성을 제고

□ 은행부문

- 新자산건전성 분류기준(FLC)의 도입으로 잠재적 부실요인까지 인식하고, 단계적으로 제거해 나감으로써 **clean bank**로 재탄생하도록 지도
 - 6월말까지 FLC의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**잠재적 부실요인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** 하고
 - 은행으로 하여금 **충당금 적립·증자 등 경영정상화 계획**을 조속히 마련토록 지도
 - 각 은행들이 **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**을 완료하는 대로 차례로 **Clean Bank선언**을 하여 대고객 관계를 일신하고 대외신인도를 제고
 - 이 과정에서 일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기관의 부담증가는 우선 금융기관이 경상이익 등으로 해소하고,
 - 부실채권 매각손실의 이연상각허용 검토,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(CRV)의 도입 등을 통해 자체정리를 유도하여 대처
 - 부실처리 과정에서 추가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증자 방식의 지원보다는 자구노력을 전제로 가급적 **후순위채 매입***등을 통해 자기책임하에 정상화가 이루어지도록 유도
- * 후순위채 매입은 국제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방식으로 증자지원과 같이 주가를 떨어뜨리는 단점이 없음
- 은행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형화 및 겸업화를 적극 유도
 - 이를 위해 금융지주회사 관련 제도의 정비, 합병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

□ 공적자금의 효율적 관리

- 공적자금의 사용실적과 향후 소요 및 조달방안에 대하여 투명하게 알림으로써 공적자금 운용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감

< 향후 공적자금 소요 >

- 금융구조조정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추산되는 공적자금 소요는 약 30조원 정도로 예상
- 30조원의 소요중 약10조원의 소요는 내년으로 이연할 수 있으므로 금년중 예보의 지출소요는 약 20조원 수준임

< 공적자금 소요 조달방안 >

- 금년도 공적자금 소요는 자산관리공사 여유자금 차입, ABS 및 교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 충당할 계획
 - 자금차입 및 채권발행 등에 따른 이자부담 발생에 대한 재정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
- 내년으로 이연한 10조원은 기투입된 공적자금을 회전 사용함으로써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공적자금 소요	공적자금 조달방안
① 나라종금 예금대지급(5월중) : 1.7조원	① 예보 자체 회수재원: 6.4조원
② 한투·대투 출자(5월~9월) :4.9조원	② 자산관리공사 여유자금 차입 : 4.7조원
③ 서울보증보험 출자(6월~12월) : 2.7조원	③ 5개은행 우선주 조기상환, 예보 보유자산의 자산관리공사 매각 등 : 2.4조원
④ 제일은행 풋백옵션(연중): 4~5조원	④ 주식(한빛·조흥·서울, 대생)담보 차입 또는 EB발행과 ABS발행: 6.9조원
⑤ 제2금융권 예금대지급 등(연중): 5~6조원	
18.3~20.3조원	20.4조원

< 공적자금 추가조성에 대한 입장 >

- 정부는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국회에서 동의받은 64조원의 범위내에서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
- 현재시점에서 정부가 공적자금을 추가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철저한 책임분담과 자구노력 선행의 원칙을 저해할 우려
- 우선 이를 위해 향후 예정된 소요에 대해서도 철저한 실사와 검증을 거쳐 가능한한 소요를 줄여나가고
 - 정기적으로 공적자금의 수급전망을 철저히 해 나갈 것임
- 또한, 앞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이 생길 경우에는 적기시정 조치(prompt corrective action)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해 나가고
 - 이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을 위해 “동종업종에 종사하는 이해관계자간의 책임분담의 원칙”에 입각하여 예금보험요율의 인상등을 통해 필요한 재원도 확충할 계획
-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시점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소요가 추가로 발생하여 기존에 사용한 공적자금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감당하기 어렵게 될 경우에는 국회 동의를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임

4. 기업구조개혁

◇ 워크아웃 등 기존에 진행중인 구조조정의 원활하고 조속한 마무리

- 기업경영여건이 호전된 기업은 조기졸업 추진
-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기업은 과감한 퇴출 유도

◇ 지속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노력을 통해 기업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

□ 그동안 기업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 결과 주요 대기업의 재무구조가 상당부분 개선되었으며 이러한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

- '99년 회계연도부터 작성을 의무화한 30대 대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의 차질없는 작성(금년 7월중 공시에정)
- 모든 금융기관의 총신용공여(total exposure) 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대기업 신용공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
- 작년말까지 개선된 재무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채권 금융단 자율의 점검 및 관리체계 구축·운영
- 새로운 자산건전성분류기준(FLC)을 보험·종금사 등 제2금융권까지 확대적용 추진

□ 98년이래 기업경영의 투명성·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왔으며, 이러한 제도개선이 관행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장참여자의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

- 상장기업의 「기업지배구조모범규준」 준수여부를 공시토록 의무화하고, 공시내용을 점검하여 위법사항에는 강력히 대처
- 상기 점검결과와 외부용역결과 등을 토대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 검토

□ 워크아웃, 법정관리·화의기업에 대한 경영관리를 강화

- 워크아웃기업(대우 12개사 포함 76개사)에 대한 철저한 경영실태점검(4.26~5.10) 결과를 토대로 과감한 퇴출을 유도
 - 경영여건이 호전된 기업은 조기졸업을 추진하고, 경영실적이 호전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채무재조정을 실시
 - 경영정상화가 어려운 기업은 주채권은행 판단에 따라 사업부문 매각후 청산 등 워크아웃절차를 조기종단토록 할 계획
- * 5.26(금) 채권금융기관 조치 계획 발표

- 화의·법정관리기업(99개사)에 대해서도 워크아웃기업에 준하는 경영관리를 강화할 계획
 - 5월중 종합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, 점검결과를 토대로 대손충당금 추가설정을 통해 과감한 퇴출도 가능토록 조치할 계획
- 아울러, 워크아웃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회사정리법상 절차특례를 규정한 사전조정제도(packaged bankruptcy)와 전문경영 담당회사인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(CRV)제도를 도입

□ 대우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

- 2000.3월말 마련된 워크아웃 대상 대우 12개 계열사 구조조정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분할, 매각 등 구조조정 추진중
 - 최근 소수채권자·주주들의 잇달은 소송으로 워크아웃 플랜의 원활한 이행에 어려움이 있으나, 개별협상 진행중
 - * 최근 대우중공업 회사분할관련 소수주주와의 합의 사례도 나타남
 - 해외채권 할인매입절차가 정식으로 진행되면(5.26일) 6월말까지는 계약이 체결될 수 있을 것이므로(지불잔차원료 8월), 소수채권자·주주와도 해외채권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개별협상을 본격화할 계획
 - 대우車 매각도 6월말까지 우선협상자 선정후 9월까지 완료하며 기타 대우전자 매각, (주)대우의 무역·건설부문 분리 등도 예정대로 추진해나갈 계획

5. 세제의 공정성·효율성 제고

◇ 금년도 세제개편은 지난해의 소득분배개선을 위한 대폭적인 세제개혁에 이어 **세제의 공정성**을 제고하고 **세제의 효율성**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

□ **세제의 공정성 제고**를 위하여 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 개선(7월 시행),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(2001.1월 시행), 상속·증여세 강화 등 지난해 개편된 세법개정내용을 차질없이 시행하면서 중산·서민층의 재산형성과 소외계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

- 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비과세 저축을 신설하는 등 저축제도를 개선하고, 우리사주 및 스톡옵션 등 성과배분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, 중산·서민층의 내집 마련을 지원
- 소외계층·공익사업에 대한 개인 기부금의 소득공제한도를 확대하여 기부문화를 활성화

□ **21C 지식정보화·디지털 경제로의 전환**을 세제면에서 뒷받침하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

- 전화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고, 평생교육과 기업의 기술·인력개발 및 지식·정보화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충하여 지식기반경제 구축을 뒷받침
- 중소·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, 지방이전 촉진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, 채권시장구조 선진화, 어음제도 개선 등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

- 조세지출예산제도를 확대 실시하여 불요불급한 조세감면을 축소·폐지하는 등 안정적인 세입기반의 확충을 통하여 2003년 균형재정 회복을 도모

□ 조세제도를 국제규범에 맞게 선진화하고 간소화하는 등 세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제도를 개선

- 전자상거래 확대, 세계경제의 통합 등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맞추어 관련 조세제도를 정비
- 휘발유·경유 등 에너지원에 대한 세율 및 유종간 가격 체계를 국제기준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
- 세법체제와 내용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 양도소득세 등 생활 관련 세금의 내용 및 절차를 간소화

□ 이와 같은 개편내용중 비과세저축 신설,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, 어음제도 개선 지원 등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항들은 개원 임시국회에 개정안(소득세법, 조특법)을 제출

- 지식기반경제 구축 지원, 기업과세제도 개선, 조세감면 축소, 세제 간소화 등 나머지 사항들은 부처협의 및 여론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에 개정안 제출

* 소득세법 등 16개 세법(관세관련 3개 법률 포함)

6. 「생산적 복지」 구현

- ◇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최대한 제공하고,
-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최저생활을 보장
- ◇ 기부문화 활성화 등을 통해서 민간의 역할 강화

☐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해소

-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2003년까지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실상의 완전고용을 실현
 - 이와함께 여성·청년실업자·장애인·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도 동시에 창출
- 정보통신, 3D업종의 단순노무직 등의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력부족 현상에 대한 해소책도 마련

☐ 능력있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고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

- 평생학습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맞추어 평생학습의 틀 안에서 학교교육을 재편성
- 1인 1PC, 전국민의 e-mail 주소 보유, 1인 2기, 1인 1외국어 등 지식정보사회에서의 적응능력 배양
- 학비가 없어도 원하는 만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비지원 등 저소득층의 교육기회를 확충

□ 사회안전망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충
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(10월 시행예정)을 실질적으로 조기 시행하여 모든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되 근로에 따른 인센티브 요소를 강화
- 국민연금·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내실화하여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
- 중산·서민층의 주거환경 개선, 문화·생활체육·관광 레저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 제고

□ 성과배분의 확산과 기부문화 활성화

- 단기적으로 임금·물가안정, 중장기적으로는 기업가치를 높여 경제성장의 혜택을 국민들에게 골고루 분배
- 중산·서민층의 재산형성을 촉진
 - 우리사주조합 및 스톡옵션 제도개선, 공기업 민영화시 일반국민의 참여 확대 등 성과배분을 활성화
 - 저축제도를 개선하는 한편, 내집마련을 위한 주택자금 부담을 경감하고 연금제도를 보완
- 개인과 기업의 기부동기를 강화하여 기부문화를 활성화

□ 지방의 기업·생활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「지역균형발전 3개년계획」을 수립·시행

- 기추진중인 기업 지방이전시책을 보완하여 시행과정에서 추가로 파악된 기업·지자체들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해소
-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본점 또는 본점기능 일부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는 방안 강구

7. 디지털경제에의 대비

- ◇ 선점자 우선의 경제인 디지털 경제시대에 앞서나가기 위하여 경제사회 전반의 정보화를 앞당기기 위한 정보화 정책을 적극 추진
- ◇ 아울러 정보화격차, 사이버테러 등 정보화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하여 철저히 대비

- 「지식기반경제 3개년계획」 등 디지털경제시대에 대비한 중장기계획을 차질없이 추진
 - 2005년까지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완료
 - 공공조달의 전자화 등 전자정부 구현을 통하여 경제사회전반의 정보화 촉진
 - 소프트웨어생산기지 육성 등을 통하여 정보통신산업 등 지식기반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, 「10대 주력산업별 비전과 발전전략」의 수립·시행 등을 통해 기존산업의 지식화 촉진
- 디지털 시대에 부합되도록 관련 법·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자유롭고 안전한 기업환경 조성
 - 개인정보보호지침·전자금융기본약관 제정·시행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
 - * 전자상거래 표준약관(2000.1), 소비자보호지침(2000.1) 등은 기시행중
 - OECD 등의 국제적인 논의동향에 맞추어 전자상거래 과세기준을 정비하고 세원탈루 방지대책 강구
 - 정보통신기반보호법(가칭) 제정 등을 통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문화 형성
- 정보화격차가 소득격차로 연결되지 않도록 정보화취약 계층에 대한 교육 등 정보화격차 해소정책을 적극 추진

◇ 최근 실물경제가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고 물가·금리 등이 모두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,

- 국제유가불안,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심리적 효과,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금융·기업분야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불안감이 상존

◇ 앞으로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바탕으로 국내외 경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는 한편, 금융·기업 등 4대부문 구조개혁방안의 추진을 가속화해 나가겠음

- 이와 아울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보다 차분하게 '실천'하여 하나하나 실행에 옮기는 자세를 견지해 나감으로써 정부정책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음